

 금융위원회	보도참고자료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생산적 금융</li><li>• 신뢰받는 금융</li><li>• 포용적 금융</li></ul>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8.10.8.(월)	
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홍성기(02-2100-2990)	담당자	김태훈 사무관 (02-2100-2991)		

**제 목 : 한국경제(10.8일) 「 “은행 중금리대출 최고금리  
年 10% 이하로 절반 낮춰라” 」제하의 기사 관련**

**<보도 내용>**

- ☐ 한국경제는 「“은행 중금리대출 최고금리 연 10% 이하로 절반 낮춰라”」 제하의 인터넷 기사(10.8일)에서,
- “금융계는 금융당국이 중·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명분을 앞세워 임의로 중금리대출 가격을 정해 ‘관차’에 나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.”
  - “한 은행 부행장은 ‘금리 자율화는 1990년대에 이미 정해진 것’이라며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이라고 해서 연 10% 이하로 책정하라고 하는 것은 자율경영 원칙에 어긋난다.’고 비판했다.”
  - “은행권 관계자는 ‘중·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은행들이 중금리대출을 줄일 것’이라고 내다봤다.”라고 보도

**<참고 내용>**

- ☐ 동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설명드립니다.

- ① 중금리대출은 금융권에 “강제되는” 대출이 아니며, 따라서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“금융회사의 금리 결정 자율성”과 무관함**

- 중금리대출은, 대출상품의 '금리단층' 현상을 완화하고, 중·저신용 차주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 자율로 운영하는 금융상품으로,

- 이를 장려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취급실적과 연계된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\*되며, 이를 취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금융회사에 어떠한 불이익도 가해지지 않음

\* 예 : (저축은행) 영업구역내 의무대출비율(30~50%) 산정시 중금리 대출실적은 150%로 인정

(여전사) 총 자산대비 대출한도(30%) 적용시 중금리대출 실적은 80%로 축소하여 반영 등

## ② 금번에 중금리대출 인정기준(현행 평균금리 16.5%)을 인하한 것은 업권별 비용요인을 감안하여 기준을 현실화한 것

- 중금리대출의 현행 인정기준(평균금리 16.5%)은 전 업권 중 비용구조가 가장 취약한 저축은행권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,
- 은행 등 낮은 비용구조를 가진 금융업권에서는 중·저신용 차주를 선별하여 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할 유인이 미약한 한계

\* 예 : 현재 은행권 자체중금리 금리대는 주로 5~10%대이며, 15%를 초과하는 대출건은 없음

→ 은행권에는 현행 중금리대출 평균금리 요건(16.5%)은 사실상 금리인하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없음

## ③ 중·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대출 공급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

-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공급확대, 사잇돌대출 기준 완화, 카드로 중금리상품 출시 등 효과를 감안할 때, 중금리대출 공급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(연 3.4조원 → 연 7.9조원)
- 또한, 서울보증보험 정보제공체계 구축 등으로 금융회사의 중·저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가 보다 정밀하게 이루어진다면, 중금리대출 공급은 향후 더욱 증가할 가능성